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2년 차 신규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일이 보도 되자 많은 이들이 슬픔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탄한다. 어쩌다가 우리 교육이 여기까지 온 것일까? 하지만 교육 현장에 관심을 주어 온 이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반응이 많다. 일부 불지각한 진상 학부모가 자행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학교에서 늘 벌어져 오던 일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교사는 24%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조사 때 68%였던 것이 해마다 하락하여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그사이 수많은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모욕과 폭행에 노출된 채 심리적 위축과 자괴감에 시달려왔고 법정 다툼에 내몰려야 했다.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위해서라도, 이 고질적인 문제가 모처럼 공론의 장에 오른 자금을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전망이 밝지 않다. 해당 학교

젊은 교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가 속한 지역의 특성, 신규 교사에게 부과된 업무의 적정성, 특정 정치인의 권력 남용 의혹 등의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관계를 무시한 억측으로 이어지기 쉽고, 하나의 사안에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 전체가 처한 위기로 인식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이 터무니없이 허락한 현실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과연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있을까? 교권은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몰리게나 학생 폭력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요받는 상태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 인권 조례에 명기된 학생의 인권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복장과 두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 등에 있어서 자유로운 권리이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권리와는 거리가 멀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의 보장을 위해 다른 하나는 희생되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교권 침해가 더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도 제출된 바 있다.

교사의 체벌을 당연시했던 야만의 시절처럼 제약적 권위로 학생을 통제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교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그런데 교육

부 수장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 때문에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진단을 내리고 교육 갈등과 혐이해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을 보면, 뭔가 한참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든 것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일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응하는 일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권을 보장할 권한과 장치가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91%에 달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손보아야 할 것은 애초에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제도다.

일선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관행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의 민원이 교사에게 여과 없이 쏟아지는 것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 민원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학교장이 주도하여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공적인 절차를 거쳐 사안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해당 교사가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악성 민원의 근거로 남용되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학교 폭력법 등 관련 법의 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가슴 아픈 기회마저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그럴 것이다.

NGO 칼럼



임성욱 사회복지학 박사

그동안 우리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동북호는 물론 주암호까지 거의 말라갈 정도로. 전남 일부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자체 식수 해결도 어려웠다. 그로 인해 민심까지 흉흉해지려는 찰나에 비가 내렸다. 처음에는 조금 내리다가 그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빗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그레도 길어지는 장마를 미워하지 않고 '귀여운 장마'라는 애칭까지 붙여 줬다. 하지만 수마로 돌변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을 강타해 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물적인 피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이처럼 세상사는 예측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게 인간 세상이지 아니던가. 그런데도 눈앞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위해 자연 훼손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종 공약 남발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일 때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려 하기 때문이다.

수해 극복에 최선을

하지만 자연의 훼손은 업적이 아니라 죄악이다. 현 세대만 이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대손손 사용해야 할 보물창고 말이다. 소아병적인 사고가 결국 오늘날의 수해로 인해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은 종합적인 국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까도 걱정이다. 이미 지구가 너무 늙었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우주 개척 경쟁의 시대에 몰입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화성을 식민지화할 계획까지 세웠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로켓을 통해 사람을 화성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2월에는 최초로 팰컨 헤비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고급 지식이 내일에는 일반적인 상식이 돼 버린다.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할까. 참으로 난맥이다. 조금만 등한시해도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난다. 사회적 주류의 리더는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생존을 위해 이합집산하며 질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요 작가인 키케로(Cicero)는 이런 말을 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그렇다. 아무

리 어두워도 항상 어둡지만은 않다. 반드시 낮은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낮을 만들어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사회 복지다. 사회 복지는 특히 스스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 복지의 영역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회 복지에서 중요시하는 문장 중의 하나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상황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이다. 우리는 누구나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번 수해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이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사회 복지사들을 비롯한 이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맥커빈과 패터슨(McCubbin & Patterson, 1983)은 가족에 따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가족의 취약성과 재생력을 조사한 바 있다. 관계 기관에서는 특히 가족을 잃은 극단적 피해자들부터 이런 조사를 시행하길 바란다. 회복력(resilience) 정도가 낮은 가족부터 한시바삐 시행하여 그들이 일상생활을 빨리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빨리 회복할수록 그만큼 국가의 재원이 덜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 화합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社說

‘침수·낙과’ 농가 폭우 피해 복구 지원 신속하게

집중 호우로 농작물 침수와 낙과 등 전남 지역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제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전남 다섯 개 군 지역 농경지 1290ha가 침수됐다. 벼 1272ha, 콩 20ha, 대파 7ha 등이 물에 잠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민들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장기화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1주일 이상 벼가 침수돼 뿌리가 썩어 들어감에도 손을 쓸 수 없어 수확량 급감은 물론 쌀의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김승호(57·해남군 산이면) 씨는 “16만여㎡의 논과 9900㎡ 밭이 이번 장맛비로 모조리 물에 잠겼다”면서 “농작물 90% 가량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복숭아 주산지인 화순 지역 과수 농가 피해도 극심했다. 복숭아나무 한 그루 당 200개에서 400개 가량 열매가 맺혀야 정

상이지만 50개 이상 열매가 남아 있는 나무를 찾기 어려웠다. 배검(65·능주면 수동마을) 씨는 “45년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건 처음이다. 복숭아 80% 가량이 떨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인근 마을 이갑진(65) 씨도 “3년째 냉해와 장맛비로 제대로 된 농사를 짓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폭우까지 겹쳐 농사를 망쳤다”고 토로했다.

집중 호우 피해가 예견됐던 만큼 충분히 대비했다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민들의 땅이 땀 1년 농사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피해 농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현실적인 재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복구 인력 지원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잦아지는 ‘극한 재해’에 대비해 농가와 국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 재해 대응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정검해야 한다.

‘용도 변경 특혜’ 감사·수사 병행 조기 규명해야

광주시가 박광대 전 광주시장(현 광주 글로벌비터스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공익 감사를 잇따라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감사원에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해 공익 감사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는 박 전 시장 아들 소유 4500여㎡ 규모의 제조 시설 부지가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 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용지 매입과 심의 위원 명단 유출 등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박 전 시장 아들이 지난 2018년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 규정된 관리 기관의 신고·승인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광주시 업무 담당자는 지원 시설 변경에 반대했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이를 핑계로 전체 위원을 교체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지원 시설 면적을 초과하면서까지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한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 지자체의 연이은 공익 감사 청구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감사원 몫으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공익 감사는 감사 실사가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돼 있지만 감사 포함하면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현직 시장이 사실상 특혜 가능성을 인정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특별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사 의뢰를 통해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無等鼓

참척(慘戚)이라는 어려운 한자 말을 자주 접하는 요즘이다.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의미한다. 천재 지면이 아니라 인재에 의한 ‘참척의 아픔’은 어느 경우보다 더 슬프다. 그런데 요즘 불과 며칠 사이 이런 일들이 일시에 터져 버리고 말았다.

지난 15일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는 시내버스와 차랑 16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호천 임시 제방이 폭우로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20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대원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지난 21일 한 2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흥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세 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나

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버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이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다. 무거워진 마음에 분노마저 치민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언제까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인제가 반복돼야 할까.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 부모를 잃은 자녀의 눈물... 우리 모두가 아 주어야 할 것이다. 문학평론가 신형철 서 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는 산문집 ‘슬픔을 공부하는 공부’(2018년)에서 세월호 참사와 개인적 아픔을 겪고 난 후 “이제부터 내 알량한 문학 공부는 슬픔에 대한 공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인간에게 특정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결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슬픔에 잠긴 사회

기 고



박수기 광주시의원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2.2%일 때 광주는 107%였다. 2021년 기준이니 현재는 이보다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 곳곳에서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민간 공영 특례 사업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전방·일신방직 터에 짓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아파트 등 2030년까지 15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되면 주택 보급률은 120%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대다수 시민이 바라는 광주의 바람직한 미래일까?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날로 높아간다. 기우 위기에 대응하는 녹지 공간 확보,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과 대중교통, 복합 쇼핑몰, 주택 공급과 산업 시설의 배치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제는 막중하다. 도시의 변화는 시민의 개별적인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갖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소수의 도시계획 위원 말고는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심의위원들이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심의하고, 어떤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투명하지 않은 심의 과정 때문에 그 결과도 신뢰받지 못한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도 의심받는다. 이해 당사자의 갈등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금이 적기

터 커진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감각이’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사람에 의해 도시가 좌지우지되고,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개발 이익이 부당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적이면서도 철학과 소신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미래 광주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집중돼 있는가 하는 문제다. 현재 조례는 위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권한 있는 누군가의 이해관계나 영향력에 의한 편향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주요 의사 결정들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니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불신이 커지고 갈등도 커진다.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의 공개가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율발 등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두어 일부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 단계적 조치를 담자는 것이다.

시의회도 분회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까지 모두 생중계로 공개되고 회의록은 속기록체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시작할 때 어지거기에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도 책임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머지않아 평가받게 될 거라 본다.

투명성을 높이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지금이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얼마 전 도시 건축에서 층수 제한을 해제하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민간 공영 특례 사업,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급격하고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선포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도시 개발의 근간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 기술관료 중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모든 시민의 공간이자 미래 세대의 삶터인 광주를 책임 있게 설계할 것이라 믿음을 주지 못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민주 도시 광주가 도시 공간 정책, 도시 개발 정책에서도 시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막강한 권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밀실 운영이라는 오명을 벗고 과감한 혁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광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국 최초 투명·공정·책임 위원회로 거듭나는 그 출발로써 회의 공개 원칙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금 꼭 필요하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